



저출산시대의 인구정책과 여성인력

이시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1. 저출산력 수준에 대한 시각

최근의 출산력 동향을 볼 때 저출산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동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1) 인구의 고령화 문제

-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
- 따라서 노인 복지 비용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장래 노동력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

- 지속적인 출산력 하강은 장래 노동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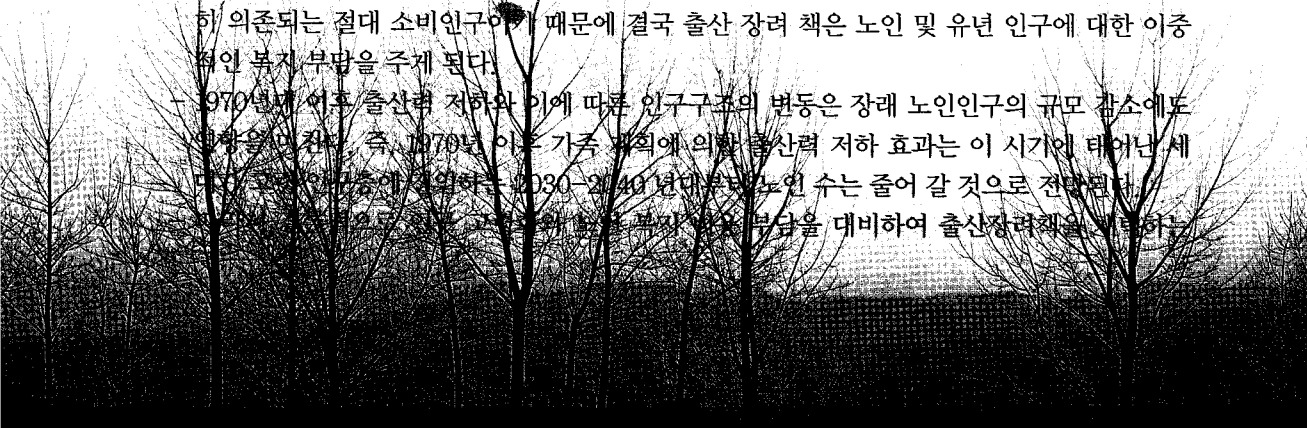
3) 인구 감소의 우려

- 정부의 장기 인구 추계에 의하면 2030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성장이 정지되고 규모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 장려책에 대한 비판

1) 인구 노령화와 노인 복지 비용 부담에 대비한 출산장려책의 모순

- 노령 인구화는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율로 정의하기 때문에 비록 유년인구 비율을 증대시켜 고령인구 비율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노인인구의 절대 규모는 변동이 없다. 그럼으로 해서 출산장려책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노인 복지 비용부담은 변동이 없게 될 것이다.
- 출산장려책에 의해 태어난 출생아는 적어도 15-20년 동안은 가정, 사회, 국가의 부양에 완전히 의존되는 절대 소비인구이기 때문에 결국 출산 장려 책은 노인 및 유년 인구에 대한 이중적인 복지 부담을 주게 된다.
- 1970년대 이후 출산력 저하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동은 장래 노인인구의 규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1970년 이후 가족 계획에 의한 출산력 저하 효과는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만 보면 감소가 정지되는 2030-2040 년대부터 노인 수는 줄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가와 사회는 노인 복지 비용 부담을 대비하여 출산장려책을 시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2) 노동력 수급 차질에 대비한 출산 장려책의 모순

- 산업 구조의 특성 및 장기 산업 개발정책의 방향으로 볼 때 인력 중심의 노동의 가치(생산성)는 떨어지고 오히려 비생산적인 소비적 가치만 증대된다. 따라서 출산장려책에 의한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다.
- 또한 출생아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 현장에 활용되기까지는 15-20 년이 걸리기 때문에 산업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비교할 때 출산장려책은 모순임을 알 수 있다.

3) 인구 감소에 대비한 출산 장려책의 모순

- 인구 동태는 국가의 지속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정책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에 의해 단기간(30-35년) 사이에 저출산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출산 문화의 특성으로 볼 때 전통적인 다출산 문화로부터 소출산 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 향후 출산력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2000년 현재 인구 밀도 465명/km²은 과밀상태로서 국민 생활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ZPG (인구 성장정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인구 감소를 대비한 출산 장려책은 생식보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실패 임신, 여성인권 측면에서 문제시된다.
- 따라서 인구 감소 예측과 무관하게 저출산력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어도 장기 국가 발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많은 OECD 국가가 낮은 출산력을 유지해 오면서도 인구 감소 위협과 국가 발전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음.)
- 현재 낮은 출산력(OECD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낮은 상태)은 여러 각도에서 재분석 및 검토가 요구되며 어느 면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인구 동태 통계를 통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여성 인력의 노동 가치는 항상 남녀 평등 수준에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 때문에 실제 기여도는 낮았다.

○그 원인은 가정, 직장 그리고 일반사회 생활에서 남녀 차별의 관행이 현재 법 제도에 관계없이 취업의 기회, 보수, 인사, 배치 등에 차별 대우를 조장했다.

위 글은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기념 인문인간대학에서 이시백 회장이 발표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ppfk.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